



김민준 기자

위드 코로나? 이윤을 위한 도박

관련 기사 6~8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2면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2면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3면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5면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8~9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10면

진보당,
F-35 반대 활동가
방어 나서야

12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김지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민간 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도로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두 지역 거주자가 크게 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이다. 사실상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일산대교는 민자사업으로 2008년에 개통됐다. 경기도가 299억 원, 사기업이 1485억 원을 투입했다. 당시 경기도는 사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소수입보장(MRG) 계약도 체결했다. 이듬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운영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인수했다.

원래 1000원이던 통행료는 이후 두 차례 인상됐다. 일산대교의 길이가 1.84킬로미터이니 킬로미터당 652원이 드는 셈인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의 1.47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교량 설치 건설에 든 비용(장기차입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



매일 출퇴근 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우 월 5~6만 원이 든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을 챙기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 덕분에 이자로만 연 160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과 우파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번 결정이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선례가 될까 봐 우려하

는 것이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시도에 제동을 걸려는 동기도 강하게 작용했을 듯하다.

누가 손해를 보는가

우파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줄여 국민 노

후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OECD 기준으로도 턱없이 낮은 부자들과 사용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연금 재정을 늘려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차별받는 지역 가입자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이 나라 지배자들은 이와는 반대 방향을 추구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반대를 물리치고 주식 투자 등 민간 자본에 대한 연금금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후 우파 정부들은 이를 늘려왔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의 노후를 도박에 거는 셈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은 자신이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손해 본 돈만 6000억 원가량이라 추정된다.

우파들은 예산 부족과 수혜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 민자 사업을 옹호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시장 경쟁 활성화로만 따서는 안 된다. 일산대교 옆에 누가 더 싼 통행료의 대교를 지을 수는 없다. 민자 사업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민간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일산대교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 자본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 부담이 줄지도 않는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수입보장을 위해 정부가 쓴 돈만 7조 4000억 원이 넘는다. 2009년 최소수입보장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소사업운영비의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메우고 있다.

자본의 이윤 보장이 우선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 안전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계급의 몫이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국민연금이 수익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을 그동안 그 통행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민자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한 일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민간투자 유치를 강조한 것 등은 그의 정치적 약점을 보여 준다. 자본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런 시도는 공공성 강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정부 투자로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없애야 마땅하다.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김영익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다.

할리우드의 많은 잠수함 영화에서 소개됐듯이, 보통 SLBM은 핵탄두가 탑재돼 핵추진 잠수함에 배치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궁극의 전략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핵잠수함

당분간 한국군은 SLBM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디젤 잠수함에서 운용한다.

다만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한 한국의 신형 잠수함들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공기에 의존하지 않는 추진체계)를 채택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기간이 훨씬 길다. 그만큼 은밀하게 숨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SLBM 같은 무기들은 북한의 ‘도발’



2018년 미국이 발사한 SLBM. 한국 정부는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무기를 도입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한다(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할지 몰라도 결국 더욱 위험천만한 전쟁의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냉전 때 핵무기 축적 경쟁을 벌였던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이 벌어지면 자국이 완전히 파괴될까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국가들 간의 경쟁은 끊임없는 불안정과 전쟁 위기를 낳는다.

한국의 SLBM 보유는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직후 북한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인도도 차기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수직발사대를 넣으려 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SLBM을 디젤 잠수함에 배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LBM은 원리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 배치돼야 그 위력이 극대화된다.

대통령 문재인은 대선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계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은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했다.

한국군이 2030년대 초까지 도입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총 9척인데, 그중 7~9번함의 추진 방식을 국방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농축 우라늄을 추진 원료로 쓰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다.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비 지출이 많은 국가다.(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2020년 군비 지출 보고서)

SL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들이 이미 개발·배치돼 왔다. 미사일 지침이 폐기돼 항후 위력이 더 강해진 탄도 미사일들이 나올 것이다.

이 밖에도 스텔스 전투기, 첨단 무인정찰기, 이지스함 등 어느새 한국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항공모함, 정찰위성 도입 등 한국의 군비 증강 노력은 그칠 줄 모른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군비를 연평균

5.8퍼센트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추세라면 2023년 한국의 군비 지출은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 이상이고 인구는 2배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군비를 늘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군비를 늘려 왔다. 또한 군비 증강에는 제국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야심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정세 불안정이 악화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퍼센트가량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그 비중이 훨씬 크다. 막대한 돈이 군비로 지출되는 만큼 노동자·서민 복지에 쓰일 재원이 희생될 수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비 증강에 따른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위험 증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군사비 지출 증대는 결국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국의 군비 증강에 반대해야 한다. 군비 증강에 쓸 재원은 모두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한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정구

8월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 뒤로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가 중국 내외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을 때부터 공동부유를 언급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했던 덩샤오핑조차 “사회주의의 목표는 전국 인민의 공동부유이지 양극화는 아니다” 하고 말했다.(1985년 3월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빈부격차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중국 지도층의 의지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공동부유를 3~5차례 정도 언급했던 시진핑은, 지난해에는 30회 언급했고 올해 들어 65차례나 언급했다. 확실히 강조점의 이동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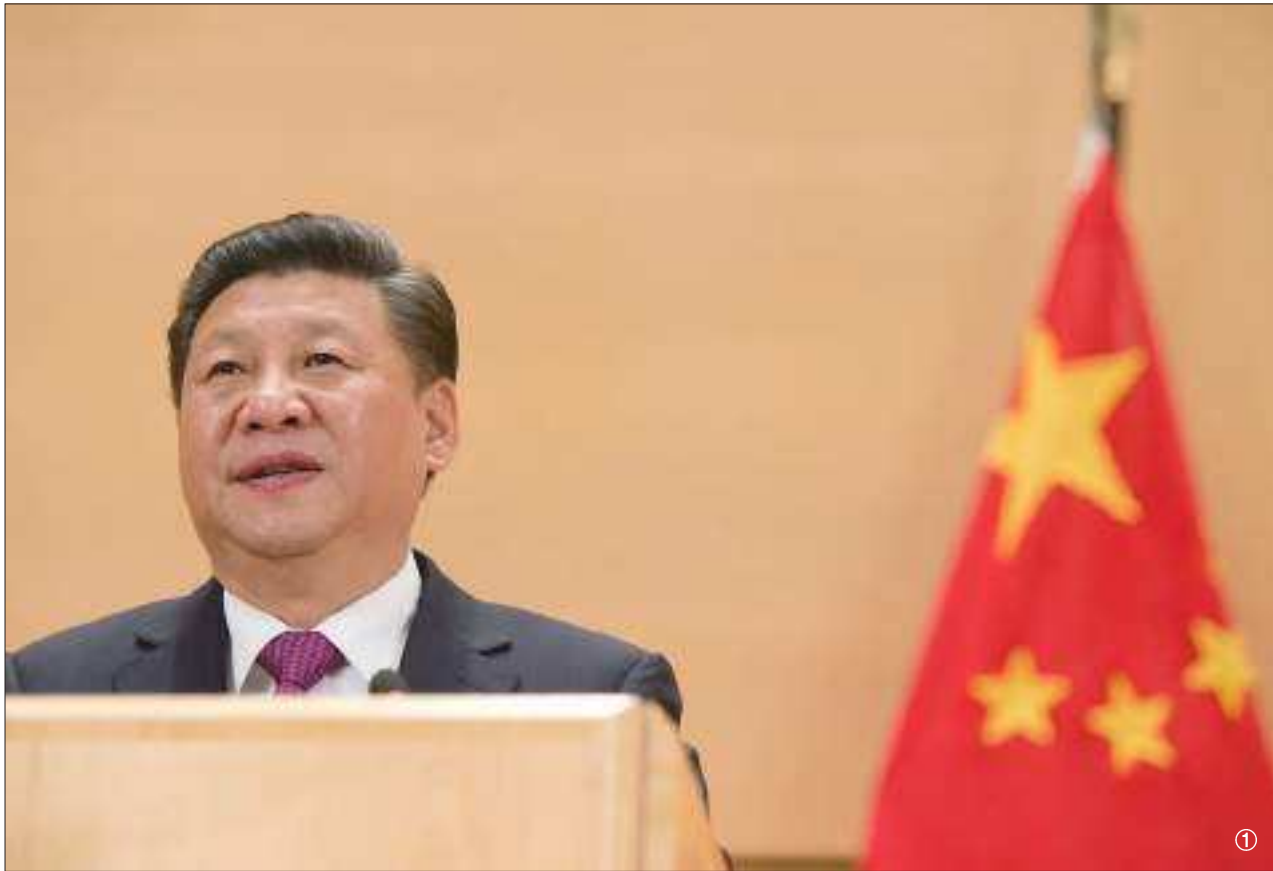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단지 빈부격차 축소를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학업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쌍감(雙減)정책’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며,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밋보인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의 일들도 벌어졌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언급하자 주요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시진핑의 통제 강화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시진핑의 행보는 문화혁명과는 다르다.

첫째,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은 지배계급 내에서 소수파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다른 지배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사령부를 폭파하라”거나 “조반유리”(반란을 일으키는 데엔 이유가 있다) 같은 대중을 선동하는 주장을 했지만, 시진핑은 이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진핑이 추진하는 통제 강화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일치 단결해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대혁명 때와 지금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정반대다. 문화대혁명 당시 덩샤오핑, 류샤오치 등을 ‘주자파’(자본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파)로 몰아 공격하던 광풍이 일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강단에서 “금융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르크스나 마오쩌둥 사상을 진지하게 다루면 시진핑 정부



①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중을 쥐어짜 국가와 국유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② 중국 정부에 맞서다 구속된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 2019년 8월 홍콩 ③ 중국의 빈부격차는 최악인 수준이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쓸 만한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

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얼마 전에도 홍콩의 한 대학에서 중국의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대륙 출신의 박사과정생 팡란이 당국에 잡혀갔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점에서 시진핑의 통제력 강화 행보는 문화대혁명과 다르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꺼내든 이유 중 하나는, 분명 빈부격차 확대로 커져가는 불만을 줄이지 못하면 중국공산당 지배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쌍순환을 통한 소득 증가와 내수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전면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방침도 현실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선부르다. 시진핑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갔고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진핑 정부가 플랫폼 · 게임 ·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곤 있지만, 기업 전체(민간기업과 국유기업 모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이른바 ‘홍색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신산업으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핀테크, 플랫폼 경제 같은 영역의 거대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을 시진핑이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호출업체 디디추싱인데, 중국 당국의 만류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미운털이 박혔다. 디디추싱은 국유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알리바바에 이은 중국 제2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의 새 수장 쉬레이가 인민해방군의 전설적 영웅 쉬샹첸의 손자라고 한다.

결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홍색 규제’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진정한 목표는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홍색 규제’의 진정한 목적

시진핑의 이런 행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첫째는 앞으로 더 강화될 미국과의 대결에 대처하고자 내부 결집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정책에서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파이브 아이즈’ 확대 같은 정책

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도 미국의 공세 강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이 성공시킨 첫째 조처는 홍콩의 민주세력들을 탄압해 일시적으로 굴복시킨 것이다. 이제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업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중국 변경과 주변국들에서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나자,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급히 보내 탈레반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처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다.

중국은 일찍부터 중앙아시아를 겨냥해 상하이협력기구를 운영해 왔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물러났지만 중앙아시아 전역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도록 내버려둘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용어설명

그레이트 게임

19세기~20세기 초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전략적 경쟁

둘째 목적은 시진핑 자신의 장기집권 토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관례를 무시하고 10년의 통치기간 외에 적어도 5년이나 10년의 통치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배계급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반발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인민 중심?

중국의 유명 인터넷 논객인 리광만은 시진핑의 일부 민간기업 통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공동부유의 길은 자본 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의 회귀이며,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자 사회주의 본질로의 회귀[다.]”

중국 내에서만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중국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여기는 세계의 많은 좌파들이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노회찬 재단의 김형탁 사무총장은 공동부유론이 “부와 소득의 격차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됐다는 방증”이자 “덩샤오핑의 선부 논리를 수정해 함께 잘살자는 마오쩌둥의 공부(共富) 논리를 결합하겠다는 노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점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고, 중국 최대 배달업체 메이탄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기뻐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진핑은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대중에게서 더 많은 부를 빼앗아 국가와 국유기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는 모순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회복도 지지부진하다.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에 대한 중국 노동자들의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실수를 하거나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증대하면 지배계급 내에서 쉽게 반대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최근에 시진핑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그의 앞날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그가 높이 오를수록 추락의 두려움도 더 커질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박가분 진보노며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페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경멸하기는 쉽다. 존슨은 이튼 스쿨[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고교] 출신의 불패한 인간으로,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악명이 높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서라면 무슨 말과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자다.

다만, 원칙 없는 자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일종의 대처주의를 신봉한다.

존슨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주권주의자’다. 영국의 국가 주권을 가장 앞세운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시장 지상주의자이기도 하다. 방역에 필요한 사회 통제 조치를 다시 도입해 경제를 손상시키느니 “시체가 쌓이게 내버려두라”고 말한 것을 보라.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존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슨은 마거릿 대처와 토니 블레어 [1997~2007년 노동당 총리] 이래 어느 누구보다도 영국 정치를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주류 신자유주의를 기꺼이 거스르려 한다는 데에 있다. 지난주 국민보험료를 인상해서 보건·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 그런 사례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 [2010~2016년 보수당 총리]의 주류 신자유주의였다. 캐머런의 후임자 테리사 메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을 되도록 유럽연합에 밀착시키려고 애썼다.

존슨은 메이를 총리직에서 밀어내고 유럽연합과 더 강경한 브렉시트에 합의했다. 그리고는 2019년 1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마거릿 대처와 토니 블레어의 금융 위기 전략을 비판했지만, 그에게 대안 전략이 있는 건 아니다

당시 존슨이 내건 “브렉시트 완수”는 탁월한 구호였다. 영국 정치권의 끝없는 책략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해, 자신을 판사·국회의원 같은 방해꾼들에 맞선 대중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구호였다.

유럽연합 잔류파들이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분노한 유권자들 — 일부는 노동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다 — 에게 호소하는 구호이기도 했다.

존슨의 승리는 존슨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그르치는 바람에 좌절될 뻔했다. 그러나 백신 보급의 성공이 그를 구원했다. 존슨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해서 백신에 거는 판돈을 키웠다.

역진적 증세

최근에 내놓은 국민보험료 인상안도 주류 신자유주의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다. 이번에는 강경 대처주의자들을 겨냥했다. 이 조처는 세금을 국민소득의 33.5퍼센트 수준으로 올린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가 개혁을 도입했던 195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싱크탱크인 레졸루션재단의 토스틴 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보수당의 저(低)세금 정치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3월 예산의 증세까지 함께 고려하면 1970년대 이래 최대 증세다.”

이것은 낮은 세금을 확고하게 신봉

하는 보수당 평의원[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각 내에서 원성을 자아냈다.

지난주 <텔레그래프>지는 정말 재미있었다. “평소 보수당에 충성해 온 한 원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장기전의 첫 전투다. 지금 보수당 정부는 지출에 중독돼 있다.” 또 다른 보수당 평의원은 “자신이 해야 하는 표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이따금씩 집에 가서 애인에게 안겨 펄펄 울었다며 보수당이 뭐하는 당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존슨의 세금 인상안은 보수당 내에서 꺾소리 없이 통과됐다. 주된 이유는 그것이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구제할 방안으로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 조치를 도입했을 때 제시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수당의 감세론자들뿐 아니라, 스스로를 NHS의 당으로 내세웠던 노동당도 허를 찔렸다.

이는 존슨이 매우 뛰어난 정치꾼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는 더 위험한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존슨은 주류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 최근에 나온 책을 계기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 40년 동안 재정적 실수를 했다. 런던과 사우스 이스트잉글랜드로 영국 전체가 득을 볼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것이다.”

여기서 존슨은 대처와 블레어가 런던 금융가를 우선시한 것을 사실상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와 팬데믹으로 연타를 얻어맞은 영국 경제를 살릴 제대로 된 전략은 없어 보인다.

국민보험료 인상은 매우 역진적이다. 그래서 존슨이 2019년 총선 때 노동당에게서 빼앗아 온 잉글랜드 북부의 “붉은 의석”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지역]에 몰려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근 유고브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5퍼센트 떨어졌다.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테지만, 대처와 블레어 모두 결국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번역 이원웅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맹회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_____)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이사벨 링로즈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임신 6주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다.

다음 달에는 공화당이 얹힌 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위헌인지를 다룰 예정이다.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주요 판례였다.

텍사스주가 이번 법안을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30개 주가 [특정 시점 이후의] 낙태를 무조건 금지했고 16개 주는 특정 경우만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했다.

2019년에는 앨라배마주에서 낙태 전면 금지 시도가 있었다.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심장박동법안’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부터 낙태 금지]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부 차원에서 효력이 중지되거나 폐기됐다.

다음달부터 연방대법원은 이런 법들과 여성들의 합법적인 낙태 시술 이용 권리가 향후 어떻게 될지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골수 우익들은 이런 법들이 도입된 이래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격하고 약화시키려 해 왔다. 그러나 우파는 분열돼 있다.

일부는 재생산 권리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법적인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난감하게 한다.

그래서 일부 우파는 낙태 클리닉을 폐쇄하는 등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없애는 방식으로 낙태권을 점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본다.

우파 정치인들은 낙태권, 트랜스젠더 권리,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서 ‘문화 전쟁’ 전략을 편다. 그렇게 해서 계급 전체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설정한 의제로 노동계급 사람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낙태를 지원하는 국제 기구에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



낙태 권리를 싸워서 쟁취했던 것처럼 우파에 의해 뒤집힌 권리도 싸워서 되찾을 수 있다. 2016년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낙태권 시위

단하는 정책(‘재갈 물리기’ 정책)을 확대했고 비영리 단체인 플랜드페어런트후드[가족계획연맹]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취임 1년차 때 낙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해 핵심 지지층을 선동했다.

미국 우파가 언제나 표를 노리고 낙태권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낙태는 1960년대 평등권 운동 등의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현상]가 일고 나서야 비로소 당파적 쟁점이 됐다.

1970년대 이전에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했다.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그들의 신념에 부합했다.

그들은 가난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정부 재원을 쓰는 것보다 낙태권을 선호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이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1972년 선거 때 처음으로 중대한 변화를 보였다.

재선에 도전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우익 가톨릭 신자들과 전통적 가치를 선호하는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가던 남부 주들의 표를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 닉슨은 낙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전략은 독특한 효과를 냈다.

닉슨은 민주당 표의 36퍼센트를 가져왔다. 대선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탈표의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닉슨은 또한 가톨릭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최초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지 3년 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대선과 총선을 모두 노리고 다시 한 번 가톨릭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 4년 후, 대부분

의 낙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헌법이 통과했다.

공화당이 낙태권 공격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민주당은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피임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더 많은 쟁점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현 대통령 조 바이든 같은 가톨릭 민주당원들은 낙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클린턴은 1992년 선거 운동 당시 자신의 낙태 정책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물게”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힐러리 클린턴도 2008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낙태권 지지와 반트럼프 정서의 물결이 자신의 백악관 입성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힐러리 클린턴은 하이드 수정헌법 폐지를 주장했다.

낙태권은 정치인들이 그저 위에서 내린 하사품인 적이 없었다. 낙태권은 항상 운동의 압력에 밀려 도입됐다.

낙태권 운동은 1960년대에 코네티컷주에서 제리 산토로가 불법 낙태 시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흑인 평등권 운동, 스톤월 항쟁이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1960~1970년대의 ‘프로 초이스’[선택권 옹호] 운동은 개혁 입법을 성취하고 낙태권 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후 우파 정부들조차 다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양보해야 한다고 느꼈다.

현재 반동 세력이 뒤집고 있는 권리들은 거리와 직장에서 수년간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이런 역사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싸워서 되찾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자신들의 단체를 설립했다.

낙태 제한에 반대하고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 초이스아메리카’가 1969년에 결성됐고, 이 단체는 1973년에 ‘미국낙태권행동연맹’이 됐다.

이들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경험을 직접 얘기하는 ‘낙태 증언 대회’ 같은 정치적 행사를 열었다.

전미여성기구(NOW) 등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체제 내 투쟁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17개 주에서 특정한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게 하는 데 일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낙태를 이용해 더 많은 표를 얻으려 했다.

대안

민주당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올라타 스스로를 진보적 대안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시스템에서 여성들이 빈곤으로 내몰려 낙태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민주당은 급진적 운동을 포섭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만들고 표밭으로 삼았다.

우파에게 낙태는 항상 사용자들의 요구와 여러 사회 부문의 대중적 지지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하는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지배계급은 여성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 노동력을 돌보게 할 필요성과,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사장들은 많은 인력이 육아로 인해 일터를 떠나는 것보다 낙태가 용이해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임신을 미루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난자 냉동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핵가족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 내는 부담을 피하려고 여전히 핵가족 제도를 지지한다.

그리고 우파들도 이를 지지한다. 보

수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족 제도를 사회 안정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제도로 여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낙태권 지지는 광범하고 대중적이다.

올해 5월 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32퍼센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48퍼센트는 낙태가 특정 상황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19퍼센트만이 낙태를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 모델이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사활적이다. 가족은 여전히 필수적인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한 연구는 팬데믹 이전에 세계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무급 노동이 제공하는 가치를 연간 3조 달러로 추산했다.(이조차도 과소평가일 수 있다.)

그리고 우파가 ‘가족 가치’를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낙태권을 짓밟는 것이다.

모순들이 있지만 지배계급은 여성이 자신의 삶과 몸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위험하게 낙태 시술을 받다가 죽든 말든, 이민자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항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입한 성과들을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필요가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규정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 또한 사람들의 시각을 규정한다.

진정한 여성 해방을 쟁취하고, 무료로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길은 착취와 억압에 기반을 둔 체제에 맞서 싸우는 것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72호 번역 오선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를지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의료 대응 역량 등 사회 인프라가 잘 돌아가지 않아 경제에도 부담이 되자, 지배자들은 부분적으로 록다운을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보급되자 위드 코로나가 새롭게 다시 얘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이 위드 코로나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레이트 베링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몇몇 역학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것입니다. 내용인즉 취약 그룹만 집중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거예요. 경제적 피해, 초과 사망 등 록다운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이죠.

이에 반대해서 2020년 11월에는 다른 역학자들이 모여서 존 스노 메모를 발표합니다. 존 스노는 1854년 런던 소호의 콜레라 창궐의 원인을 추적한 '근대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내용이 <팬츠>에 실렸는데요. 이들은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을 반박합니다.

먼저 코로나 취약 그룹인 노인,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필수 대면 노동자들이 사실상 인구의 40퍼센트나 되는 데 이들을 어떻게 따로 보호하냐는 것

이죠. 또, 젊은 사람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면 전파가 늘고 그에 따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망이 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롱 코비드'라 불리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뇌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하죠.

지금 얘기되는 위드 코로나는 백신의 요소가 더해진 것 외에는 트럼프나 보리스 존슨이 팬데믹 초기에 취하려고 했던 것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코로나가 인플루엔자에 비해 치명률이 5~10배 높습니다. 또, 빨리 번집니다. 델타 변이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독감과 비교해 3~4배가 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 와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코로나는 그렇게 순화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했으니 방역을 다 풀어 버리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스라엘이나 영국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가 안 됩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인구의 약 15퍼센트) 등의 접종 거부 문제 등으로 접종률이 높지 않죠. 그런데 방역을 완화하고 나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말이죠.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풀고 나서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으로 치솟고, 하루에 200명씩 죽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병실과 인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을 완전히 풀면 사망자는 늘어납니다. 당연히 첫째 희생자는 가난한 노인과 약자들입니다. 또, 의료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로 환자가 늘면 그 피해가 사회의 평범한 서민들에게 집중되죠. 결국 노동자·서민(과 그 가족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는 나라마다 그 맥락이나 대응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요? 사실 한국 자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열의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듯이 보이니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이죠.

한국은 엄격한 거리두기와 광범위한 검사·추적·격리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역에 효과를 거두기도 했거니와, 그로 인해 자본가들이 손해 본 게 상대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자본이 이익을 내는 곳들은 거리두기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물류업, 백화점이나 마트 같



‘백신 접종은 부국에 집중되고, 빈국은 접종률이 1.9퍼센트밖에 안 돼요’

은 서비스업은 기존대로 굴러갔죠. 지하철과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된 곳은 개인 서비스업(자영업), 학교, 요양 서비스였죠.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노동계급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학력 격차가 벌어졌어요. 요양원의 노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죽어 갔죠. 지난해 겨울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45퍼센트까지 됐어요.

미술관이나 예술관? 부자들은 미술관 달아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닫으면 노동자들이 즐길 곳이 없어요. 공공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공부할 곳이 없어요.

즉, K방역 하에서 코로나의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반면, 자본가들은 크게 손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K방역에 크

게 불만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병원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 정책은 소수 공공병원이 독박 쓰는 정책이었어요. 공공병원들만 코로나 환자를 봤기 때문에(입원 환자의 약 80퍼센트) 사립 재벌 병원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면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의료 대응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병원 자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힘든 척하며 업무를 부리지만, 사실 K방역이 그대로 가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K방역이 너무나 불평등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일정 부분 진보적인 측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는 분명히 악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낫다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백신이 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 비율이 10퍼센트로 줄어드는 건 확실하니까요. 현대 과학의 성과죠. 인구 70퍼센트가 접종을 마치면 방역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방역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원래 감염재생산지수가 2~2.5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집단면역에 필요한 면역 인구가 70퍼센트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는 재생산지수가 5~9라서 면역 인구가 80~90퍼센트는 돼야 이

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감염자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델타 변이의 경우, 백신 접종 뒤에도 이른바 ‘돌파 감염’이 될 확률이 40퍼센트 정도 되고, 이렇게 돌파 감염된 사람의 경우 남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율이 백신 비접종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방역을 영국처럼 급격히 전면 완화하면 백신 미접종자의 집단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백신 접종률에 따라 어느 정도 방역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안 됩니다. 또 방역 완화의 속도도 의료 대응 등 준비를 먼저 갖추고 이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 대응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죠. 하루 확진자가 5000명 내지 1만 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그러려면 공사립 병원 모두 코로나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1~4차 유행 시기 때마다 병상 부족이 반복됐습니다. 자택 대기 환자가 발생하고, 그러다가 위중증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요. 요양병원은 말이 병원이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

▶ 7면으로 이어짐



우석균

▶ 6면에서 이어짐

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병상 수는 세계 1등입니다. 엄청 많아요. 다만 코로나 병상이 부족한 거죠.

지금 코로나 대응을 10퍼센트의 공공병원, 그중에서도 1~2퍼센트의 지방의료원들이 다 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3차 종합병원은 고작 중환자실의 1퍼센트만 동원하라고 명령했어요. 4차 유행 시기에도 수도권 26개 종합병원의 병상 1.5퍼센트만 동원 명령을 내렸죠. 이조차도 실제로는 다 안 됐다고 해요.

언론에서 삼성병원이 코로나 병실을 내놨다고 엄청 띄웠는데, 고작 20개예요. 웃기는 게 삼성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중증이 아니면 공공병원으로 보내요. 이렇게 되면 병상이 모자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감염 위험도 높아지죠. 코로나 의료 체계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과 방역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의료 노동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사망감 하나로 일하고 있어요. 그만 두거나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요. 자기 눈 앞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심리적 번아웃(탈진)도 있어요.

보라매 병원을 예로 들면, 간호 인력이 110명 있었는데 간호사 6명이 환자 50명을 돌봤다고 해요(지난해 12월 근무기록 기준). 파견 인력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간호사 1명이 코로나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1:1로 마크해도 부족하죠. 다른 업무들도 있고요.

지금 한국이 무지막지하게 백신을

놓고 있는데, 이것도 의료 인력을 갈아넣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100명 넘게 백신을 접종했고요. 그런데 이러면 의료진이 환자를 제대로 못 봐요. 백신 맞고 다음날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백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다음날 죽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볼 겨를이 없었다면 정말 문제인 거죠.

둘째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 방역도 극복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거리두기는 없애고, 불가피한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해요.

학교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코로나 감염의 허브가 아니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졌어요. 영국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초중등 학생들을 검사했는데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를 닫으면서 불평등만 늘었죠. 물론,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고 고령의 교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요.

야외 집회도 허용해야 해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했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온 집회가 지난해 8.15 우익 집회였죠. 여기서 확진자가 500명이 나왔는데요. 뭐 이미 교회에서 감염돼왔을 수도 있고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도 안 쓰고 일부러 침도 뱉고 그랬죠. 매우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걸 포함하더라도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0.2퍼센트에 불과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면 야외집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아요. 야외 감염 확률은 0.1퍼센트 미만이라는 논문들도 있고요.

요양원도 지금처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 1인당 허용되는 공간이 1.7평 정도 돼요. 이건 안마 시술소나 미용실보다도 못한 건데요. 요양원·요양병원의 내부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지원해야지, 이 요양시설을 ‘사회로부터 거리두기’, 즉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편, 불가피한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3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 감염의 60퍼센트가 이렇게 이뤄진다고 해요.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꽤 있겠죠.

이러한 영업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충분한 생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 형태가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언론이나 정부의 주장을 보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위드 코로나를 얘기해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안 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운 걸까요?

일본과 비교해 보죠. 일본은 자영업자 소득이 30~50퍼센트 하락했을 때 중앙정부가 임대료의 3분의 2를 6개월간 보상해 줍니다(상한 50만 엔, 약 530만 원). 소득도 월 10만 엔씩 1년을 보상해 줍니다. 영업제한을 하면 하루에 4만~6만 엔을 줍니다.

바이든도 재정을 꽤 많이 풀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이 적었지만, 우리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IMF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을 보면, 확장재정이 GDP 대비 일본은 15.6퍼센트, 이탈리아 6.8퍼센트, 독일 11.0퍼센트, 영국 16.3퍼센트인데 한국은 고작 3.4퍼센트입니다. 이것조차도 노동자·서민에게 다 돌아간 게 아니죠.

이처럼 한국이 유독 재정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말과 다르게 정부의 속내는 ‘원래 자영업자들 많이 망하지 않았

어? 우리 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은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냉혹한 정책이죠.

게다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통 호소가 이 정도면 거기에 고용됐던 노동자들은 거의 다 해고됐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거리두기도 더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방역이 최고 단계일 때 기업에 50퍼센트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어요. 다른 나라도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나라는 4단계일 때 고작 30퍼센트를,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고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가는 길, 즉 버스나 지하철은 지금 완전히 3밀 공간이에요. 따라서 대중 교통도 대폭 늘려서 안전한 대중 교통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드아웃 코로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처럼 불평등한 방역이 아닌 위드 코로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불평등과 야만적 세계

백신 문제만큼 이 체제가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보여 주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9월 12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42퍼센트가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이걸 중국 등이 무지막지하게 백신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국들은 접종률이 70~80퍼센트 돼요. 그런데 빈국은 접종률이 1.9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격차가 정말로 심각하죠.

이래서는 효과적으로 변이 발생을 억제할 수 없어요.

WHO는 선진국에 부스터샷을 연발까지 미루고, 우선 빈국과 제3세계에 나눠 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까요?

현재 백신 생산 공장을 풀가동하면, 제3세계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옥스팜의 올해 5월 20일자 보고서

를 보면, 백신으로 새롭게 억만장자가 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9명 재산을 합하면 193억 달러입니다. 이 돈은 전 세계 최빈국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돈의 130퍼센트라고 말합니다. 또 기존 억만장자 8명(과 가족)이 백신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번 돈이 322억 달러로, 이것은 인도의 모든 민중에게 백신을 다 접종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의 절반이 백신을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천문학적 이윤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옥스팜이 급진적인 단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단체인데요. 이들의 인도주의적 주장조차 지금 이 체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바이든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립서비스를 했어요. 유럽이 반대했고, 지적재산권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WHO는 만장일치 구조이기 때문에 면제가 통과되지 못

하죠. 바이든은 자기 우방들에게만 백신을 나눠 주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기술을 이전해 봤자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변명밖에 안 돼요. 모든 나라에서 다 백신을 생산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대륙에 몇 개국에서만 생산하면 돼요. 남아공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생산할 능력이 되고요. 효능이 어떤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쿠바도 ‘압달라’(호세 마르티의 시에서 따온 이름)라는 이름의 백신을 자체 생산했거든요. 이 백신을 베트남과 베네수엘라가 기술 이전을 해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요. 지적 재산권을 풀면 생산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즉 기술이 없거나 생산 시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이윤 때문에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노바백스는 지금 백신을 만들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가 시장을 점유한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

공급해 봤자 이윤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출하 시기를 두고 보는 듯합니다. 이윤 중심의 무정부적 생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곤 하는데 확실한 수는 없어요.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으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이윤이 얼마나 남을지 불확실하니까요. 특별히 부국에서 텔타변이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절실한 상황도 아니고요. 빈국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백신 개발과 생산과 분배가 계획 속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백신 의무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왜 백신을 안(못) 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시간을 빼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아요. 시간을 빼기 어렵고, 빼면 해고될 처지로 내몰리는 거죠. 우리 병원에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평일에 맞으면 다음날 아파도 쉴 수가 없으니까요.

일부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서 백신을 놔줘야 하는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처럼 백신 맞을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람들에게 백신 맞을 시간과 아프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죠. 일단 이런 사람들이 다 맞게 한 후에야 의무화네 차등이네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안티 백신(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왜 판을 치느냐? 그건 그만큼 현대 의학과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국이 안티 백신이 많잖아요?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는데도 미국 의료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엉망인 의료체계가 안티 백신이 자라날 토양이 되는 거죠.

▶ 8면으로 이어짐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김준호

놀라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해가 있다. 2011년도 그런 해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아랍 세계 곳곳으로 번졌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테델솔 광장에서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분출해 스페인을 뒤흔들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전투적인 점거 운동이 분출했다. 이 운동은 이후 몇 해 동안 수십 차례의 하루 총파업을 포함한 노동자 투쟁 물결로 이어졌다.

스페인 · 포르투갈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조합들의 부름으로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연금 개악에 맞서 200만 명 규모의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긴축 공격과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분노해 전국적 소요가 벌어졌다. 1990년 마거릿 대처를 끌어내린 주민세 소요 후 20년 만이었다.

그리고 ‘점거하라’ 운동이 있었다.

좁은 의미에서 ‘점거하라’ 운동은 2011년 9월 17일 ‘월가를 점거하라’로 시작돼 미국과 세계 곳곳으로 번진 광장 점거 운동을 가리킨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은 한 달 만에 수십 명에서 10만 명 넘는 행진으로 커졌고, 세계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호소하게 됐다.

앞서 열거한 사건들 모두가 이 운동에 영향을 줬다.

광장 점거라는 형식 자체도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점거에서 따온 것이었다. 스페인 · 그리스의 광장 점거도 마찬가지였다.

이 운동들은 광장 점거라는 형식뿐 아니라 배경도 같았다.

단연코 중요한 요인은 2007~2008년 경제 위기였다. 각국 정부가

위기에 대응해 긴축으로 일반 대중의 삶을 공격하면서 거대한 불만이 고였다.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안고 취임했지만, 고작 2년도 되지 않아 커다란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에서는 우파 정부들은 물론이고,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도 긴축 · 민영화 같은 공격을 지지하고 직접 집행했다. 이 때문에 주요 나라들에서 주류 개혁주의 정당들이 잇달아 정치적으로 파산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 위기로 가속된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특히 유럽에서 중도 좌파 정당들은 우파 정당들과 번갈아 집권하며 민영화,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지지를 잃어 왔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공격에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대중의 불신과 분노는 커졌다.

2008년에 추락한 경기는 2011년이 되자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 공업국에서도 그랬다.

이 시점에 아랍 혁명으로 누적된 분노가 분출해, 투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은 집단적인 자력 해방의 모습을 흘깃 보여 줬다.

아랍 대중은 독재 정권뿐 아니라 그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맞서 싸웠다(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그래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신음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집트 혁명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서방 국가들은 중동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이슬람 혐오를 퍼뜨렸는데, 바로 그 서방의 대중이 저항하면서 아랍 최대 도시의 운동을 모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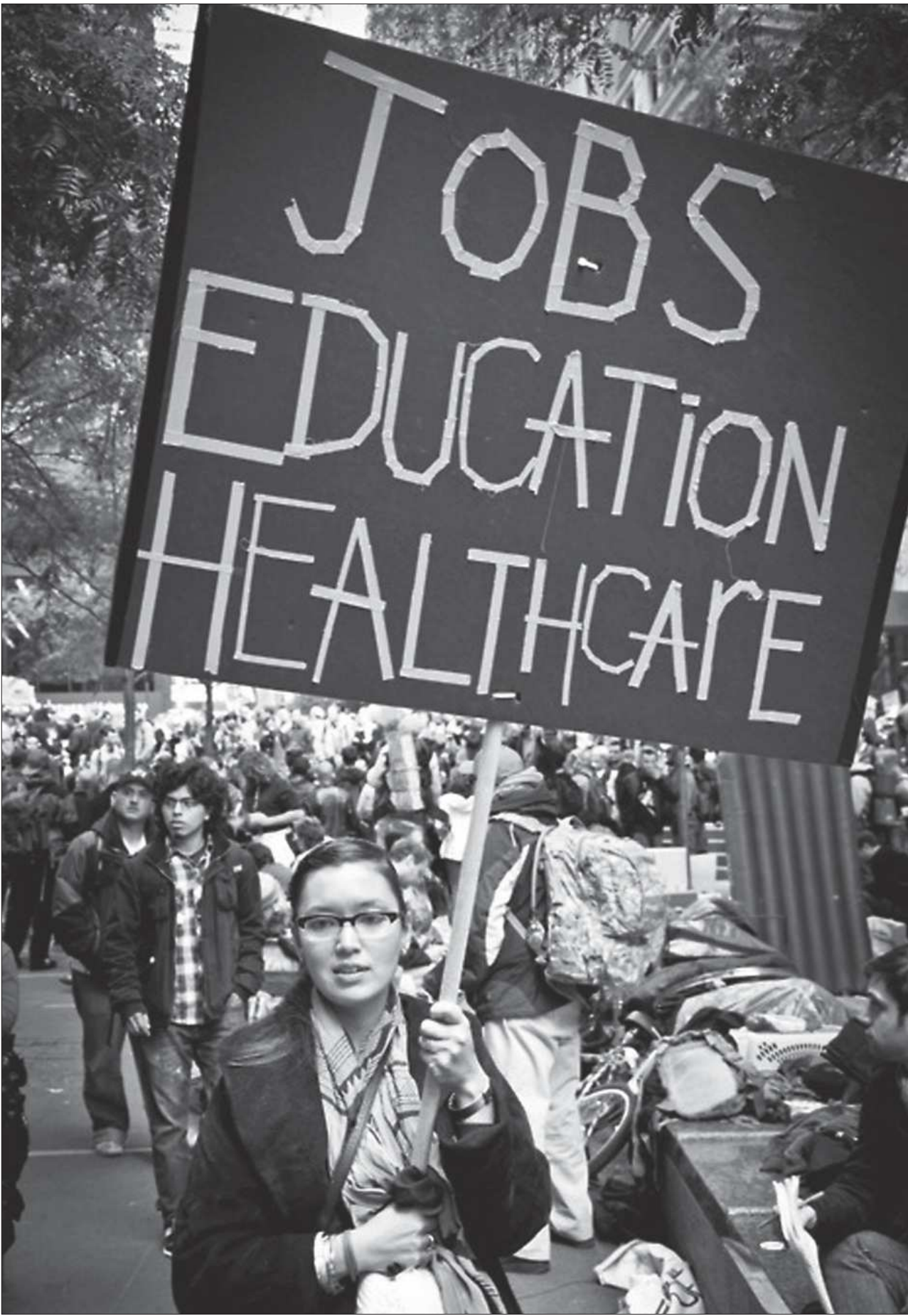


사진 출처: Luis Caldera(틀라카)

아랍 혁명과 유럽의 반긴축 투쟁의 물결이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으로 이어졌다. 2011년 10월 3일 미국의 ‘점거하라’ 시위

▶ 7면에서 이어짐

팬데믹의 전망

자본주의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코로나19가 새삼 다시 보여 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백신의 불평등 문제, 방역을 잘했다는 한국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현실, 가장 선진적인 의료체계라는 NHS가 있는 영국에서 하루 100~200명씩 노약자들을 죽이는 것, 아프리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집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인류에게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코로

나 시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적재산권 면제 같은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인 요구조차도 탈자본주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니까요.

팬데믹은 단지 역병의 위기가 아니예요. 팬데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회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기후 위기 등 여러 위기가 중첩돼 있어요.

기후 문제도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른 타임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5년을 팬데믹과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질병에 맞서 모두가 단결해

싸우자고 하면 안 돼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 지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위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IMF 위기 때도 다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금 모으자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고 불평등이 늘었죠. 그나마 당시 일부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반격해서 그 정도로 그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반격이 필요합니다. 생명, 건강, 주거, 고용, 소득, 문화와 같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하

는 게 지금의 팬데믹 시기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은 사회의 계급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싸워 이겨야 할 ‘역병과의 전쟁’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지금의 팬데믹은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닌 사회계급들이 ‘투쟁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인류의 생명과 미래는 아랑곳없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 나가려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팬데믹의 전망은 이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기 요구를 걸고 싸우느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 정리 성지현



추천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정호중 지음
정호중 역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 의의와 약점

‘점거하라’ 운동은 투쟁이 얼마나 빨리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이집트 혁명 몇 달 후인 5월에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9월에 미국 뉴욕에서 광장 점거가 벌어졌다. ‘점거하라’는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구호가 됐다.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라는 ‘점거하라’ 운동의 구호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최상층에 있는 대기업과 기득권층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운동은 위기에서 부자들만 구제하는 오바마 정부 등 각국 정부들에게 “1퍼센트가 아니라 99퍼센트를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광장 점거 참가자들은 주로 청년이었지만, 운동은 더 광범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급진화를 추동했다.

하지만 이 구호에는 약점이 있었다. 이 구호는 한 줌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단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정치를 함축한다. 훗날 스페인 포데모스의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이를 “카스트 대 민중”으로 정식화했다.

이런 정치(민중주의)는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고, 이 사회가 적대적 계급들로 나뉘어 있음을 흐린다.

한편, 이 구호는 기득권층과 주류 정치권에 대한 광범한 불신(반(反)정치)

을 반영한 것이었다. 반정치는 ‘점거하라’ 운동의 주된 특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정치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는데, ‘믿을 것은 수평적 연대뿐’이라고 여기는 연성 자율주의 정서가 그것이었다.

이런 정서는 때로 조직 노동운동과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특히 스페인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스페인에서 수십 년 동안 노동계급 투쟁이 비교적 취약했고, 조직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는 스페인 사회당이 노동계급의 염원을 배신하고 긴축 공격을 추진(하고 노동조합 관료층이 이에 합의)한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이집트에서는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이 섬유·공공 노동자들의 대중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결에 혁명적 좌파가 작지만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파업들은 광장 점거 운동이 제시한 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투쟁이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 사례였다.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점거 후 몇 년 동안 40회에 가까운 하루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파업이 벌어졌다.(그리스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등 혁명적 좌파가 파업 확산에 커다란 구실을 했다).

미국에서도 ‘점거하라’ 운동은 오랫동안 저하됐던 노동자 투쟁을 자극했다. 같은 해 초 위스콘신주(州) 공무원 노동자들이 주의회를 점거했고, 이듬해에 시카고 등지에서 두드러지는 교사 파업이 벌어졌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투쟁들은 대개 방어적 투쟁이었고, 노동조합 상층 관료의 강력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이런 통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사회의 정치적 불안이 노동계급의 경제적 투쟁으로 되먹임되고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이 다시 정치 운동을 고무하는 동학을 억제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과 좌절

운동이 고조되는 시기에 ‘점거하라’ 운동의 이런 약점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운동이 더 전진하지 못하고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운동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집권을 통해 개혁을 제공한다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치인과 정당들로 눈을 돌렸다.

2015년에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집권했고, 이를 전후해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가 부상했다. 같은 해 말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노동당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라는 제러미 코빈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들의 정치는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기성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대안을 자처하며 성장했다.

이런 부상은 분명한 일보 전진이었다. 2015년 시리자 집권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최초로 급진 좌파가 서구에서 집권한 사례로 일컬어지며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좌파적 정당들의 부상은 기성 정치 질서에 균열과 파장을 낳았다.

하지만 이들은 곧 근본적 문제에 부딪혔다.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해 위로부터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은, 그 국가가 수호하는 체제를 보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거듭, 체제 유지의 필요와 노동계급 대중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개혁주의는 동요하다 노동계급에 맞서 체제를 수호해 왔다. 체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유럽연합·IMF의 긴축 요구에 반대



2015년 집권한 시리자 정부는 금세 반긴축 열망을 배신하고 도리어 긴축을 시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우)와 악수하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좌)

하는 대중의 염원을 등에 업고 2015년 집권한 시리자는 집권 반년 만에 그런 선택에 직면했다.

2015년 7월에 긴축 정책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0퍼센트는 반대에 투표했다. 그런데 그 투표 후 1주일도 안 돼, 시리자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투표 결과를 거슬렀다. 긴축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긴축을 시행해 잉여를 늘리는 것뿐이라며 (그래야 언젠가는 그 잉여를 노동자들에게 돌려 수도 있다며) 말이다.

시리자는 정치적으로 파산했다. 결국 4년 후 시리자는 우파 정당 국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중주의를 시리자보다 훨씬 더 분

명히 추구했던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폭발적 성장기가 지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상식적” 수준으로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포데모스는 인디그나도스 운동의 염원을 반영한 대표 공약들을 속속 철회했고, 이에 반발하는 기층 당원들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이후 포데모스는 자신들이 애초에 “카스트”로 규정하고 “손잡지 않겠다”고 한 사회당의 연정 제안을 수용했다. 그 결과 포데모스는 초기의 기세를 완전히 잃었다.(관련 기사 본지 368호 ‘광장 점거 운동에서 포데모스의 좌초까지’)

한편, 미국에서는 ‘99퍼센트의 후보’ 버니 샌더스가 부상했다.

샌더스의 정치는 유럽 주류 사회민

주주의 수준이었지만, ‘점거하라’ 운동에서 급진화한 수백만 청년들에 광범한 호소력을 발휘했다(미국의 복지가 특히 열악한 영향도 있었다).

샌더스 선거 운동은 “사회주의를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시켰다는 평을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권 도전에 특별히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 민주당 예비경선 후 샌더스는 뺏속까지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에 지지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을 저지하려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차악론’에 입각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차악론’은 ‘점거하라’ 운동에서 나왔던 — 그보다 10여 년 전

기업 중심 세계화 반대 운동에서 파온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에 담긴 염원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샌더스 지지자들의 사기는 추락했고, 결국 그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샌더스는 4년 후 다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해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 주류의 집요한 방해와 책략으로 좌절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든 ‘차악론’에 손을 들어줘 지지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교훈

오늘날 팬데믹 위기와 기후 재앙, 끝나지 않는 경제 위기는 이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촉발점이 돼 예상치 못한 대중적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거하라’ 운동의 성쇠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바로 거대한 위기에서 비롯한 거대한 투쟁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전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점거하라’ 운동이 벌여졌던 지난 번 반란 물결에서 교훈을 이끌어내, 체제 내 개혁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 맞서기를 촉구하는 혁명적 정치 전략과 운동(조직)을 미리 갖춰야 한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시리자 좌파 스타시스 쿠벨라키스와 논쟁하며 “전략의 귀환”에 대해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145호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 노동계급의 힘을 키워 국가를 깨뜨려야 한다’).

그런 정치 전략과 운동(조직)이 있어야만, 위기의 결과에 대한 분노가 투쟁으로 분출했을 때, 그 투쟁이 위기의 원인인 체제를 겨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정선영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지의 온실가스(탄소) 부과 비용이 유럽연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만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한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탄소국경세를 통해 탄소 배출 축소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불분명한 반면, 이 정책이 유럽 기업들의 이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의 철강, 화학업계 등은 대표적 보호무역 조치인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와 함께 탄소국경세 도입을 요구해 왔다. 중국, 러시아 등의 값싼 철강 때문에 유럽의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말이다.

표리부동하게도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때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제공하는 제도는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고는 했지만) 203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 대처를 말하면서도 자국의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주로 중국, 러시아 등 신흥개발국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바이든도 유럽의 시도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위선

그러나 산업화 이후 오랫동안 많은 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들에 기후 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선적이다.



사진 출처: Euronor

적극적으로 유전 개발 중인 노르웨이 석유 회사 다른 나라에 책임 떠넘길 게 아니라 이런 기업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따지면 미국은 25퍼센트, 유럽연합은 22퍼센트, 중국 13퍼센트이다.(선진국 주도의 ‘녹색 전쟁’ ... 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한겨레>)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약 117조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순배출량 제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탄소 흡수 기술들과 나무 심기 같은 정책들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겠다는 아주 미심쩍은 개념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도 줬다.

바이오 연료(곡물이나 그 잔여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확대가 대표적이

다. 유럽연합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바이오 연료를 강조했고, 유럽의 에너지 생산에서 그 비율은 증가해 왔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을 파괴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 농민들을 토지에서 몰아내는 일들이 벌어졌다.

게다가 막대한 곡물이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순배출량 제로를 위해 유럽의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땅에서 살던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석탄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우간다에 2만 헥타르의 토지 구입 비용을 지불했는데, 막상 나무가 심어진 면적은 600헥타르에 불과했고, 거기에

살던 농부와 목축업자 수백 명이 땅에서 쫓겨났다.(권상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연합의 지배자들이 친환경 포장을 하며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린워싱의 일종일 뿐이다.

불평등

게다가 이런 정책은 유럽연합 내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탄소국경세는 탄소세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탄소세는 도입한 나라 대부분에서 탄소 배출량 1톤당 얼마 하는 식으로 부과되는데, 흔히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과된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보호한다면서 기업들에게는 탄소세를 감면해 준 반면,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는 높은 탄소세를 부과했다.(예를 들어 스웨덴의 탄소세율은 산업부문 23달러,

일반 104.8달러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온 것이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탄소세 인상에 맞서는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에 탄소세가 도입됐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1톤 배출할 때마다 30.5유로(3만 9150원)씩 부과하던 세금을 2030년까지 계속 올려 1톤당 10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자 프랑스의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한 것이었다.

당시 노란조끼 시위대는 부자에게 막대한 감세를 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서민 세금 올린다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 하며 싸웠고, 결국 유류에 부과하는 탄소세 인상 조치를 철회시켰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또는 겨울에 이상 추위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가와 전기료 인상 등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가난할수록 기후 위기로 인한 고통도 큰데, 그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진정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탄소국경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화석연료 사용 설비를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 비용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화석연료 산업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둔 기업과 부자들이 내야 한다.

이윤 경쟁을 위해 굴러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이런 대안을 알아서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 논리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의 전진에 기후 위기를 멈출 진정한 동력이 있다.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김지태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소속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대리점 소장들이 떼가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9월 6일부터 투쟁하고 있다. 대리점 몫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에서 15~20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떼간다고 한다. 노조는 다른 지역 대리점의 평균 수수료(10~12퍼센트)보다 훨씬 높으며, 적어도 14퍼센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저는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소장에게 냅니다. 소장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들은 특하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구역 조정으로 임금을 깎았습니다. 일부터 왕따를 시켜서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갑질’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경기도 김포의 한 대리점 소장의 자살을 계기로 연일 택

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해 노동자들과 노조를 공격해 투쟁을 위축시키려 한다.(관련 기사: 본지 384호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원청인 CJ대한통운도 책임이 있다. 사측은 이런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해 왔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횡포도 눈 감아 왔다.

부산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대리점 소장들의 횡포에 맞서 태업을 하고 있다. 택배 포장이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어 배송할 의무가 없는 상품들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반품 수거도 거부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배송 지연 투쟁도 하고 있다고 한다. 분류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평소보다 2~3시간 일찍) 낮 12시에 배송을 나가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분류가 늦게 끝난) 일부 물품들은 택배터미널에 남게 된다. 대리점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 물건들을 배송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대리점연합회와 친사용자 언론들은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택배 노동자들이 생떼를 부린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그 정도 받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연봉 7000만 원을 벌려면 적어도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그렇게 벌 수 없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대리점의 부당한 임금 착복에 항의하는 택배 노동자 투쟁은 정당하다. 투쟁이 성과를 내길 응원한다.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이정원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 이후 택배 노조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을 침소봉대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제거하고 지엽적 사실만 떼어낸 전형적인 왜곡 보도가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택배노조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주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이를 두고 ‘노조 갑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84호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우파 언론들은 대리점주가 원청에 종속된 ‘을’의 지위이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한 ‘갑’인 원청의 대리점주 압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조 갑질’이 불쌍한 대리점주를 코너로 몰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이 형식적으로 택배기사들과 1대 1 위탁 계약을 맺고, 원청보다 권한이 적다고 해도 **이들은 엄연한 사용자다**. 이윤을 위해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청과 대리점주들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대리점주는 자신의 택배 대리점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임금 등)을 핵심적으로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비록 원청보다 적게 이윤을 가져가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대리점주들이 원청에 대해서는 ‘을’일 수 있어도,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노조가 ‘갑’의 위치에서 괴롭힌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거꾸로 세운 것이다**.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의 책임을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떠넘기며 택배 노조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사용자와



‘노조 갑질’ 비난은 노동자 투쟁 위축시려는 악의적 시도

언론의 비열한 행태는 목적이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꺾어내고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최근 CJ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에게 김포지회 조합원들을 전원,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총사퇴, 노조 규약에 집단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문화 등도 요구했다. 이 참에 노조를 무릎 꿇리고 기를 꺾으려는 심산인 것이다.

노조는 이런 공격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비난 공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적극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주간 택배노조는 거의 홀로 비난 세례를 맞았다. 주요 노조와 좌파

정당·단체들은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방어로 소극적이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 공세가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의 자주성

한편, 얼마 전 <조선일보>는 택배노조의 한 간부가 일부 대리점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노조 간부가 대리점주들을 압박해 상납금을 받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대타 인건비’ 명목으로 3차례 돈을 모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갑질’, ‘횡포’라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같은 자들이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에 진지한 관심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무엇보다 수백억 원

을 뇌물로 갓다 바친 이재용 석방을 환영하고 나선 자들이 택배노조에 도덕성 잣대를 들이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친사용자 언론들의 집요한 택배노조 두드리기는 노동자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는 계급의식적 행동이다.

물론, 사용자와 친사용자 언론들의 위선적인 비난에 단호히 선을 그으면 서도, 노조가 자체적으로 돌아볼 점은 있다.

일부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건넨 돈이라 해도, 노조 간부가 그 돈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노조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사용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노조 또는 노조 간부에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돈을 지원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측에 유리한 양보나 최소한 순응을 바라는 것이다**.

노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자

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벌여 그 일부를 노조 기금이나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금·자조해 노동조합을 지탱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노동자들의 이해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적잖은 노조들이 정부나 사용자들로부터 시설·기금 지원을 받는 것을 성과나 관행처럼 여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택배노조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를 반박하며 “노조 부위원장이면서 상근 활동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대리점장들이 성의를 표한 것”이라고 용인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물론 일부 대리점주들은 원하청 관계에서 대리점주들의 입장에 헤아려 주길 바라며 노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투쟁이 강력하면 더욱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노골적인 뇌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용인하면 사측에 대한 비판적·투쟁적 태도를 시나브로 무디게 만들고, 노조의 건강성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최근의 비난에 맞서면서 자체적으로 ‘노조활동을 신중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때 각 사안의 성격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경중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조 간부가 사용자에게 돈을 지원 받은 것은 노동자 투쟁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이다.

반면,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조합원들의 연사 문제는 고작해 봐야 전술적 미숙함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거나 관련 내용의 규약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신정환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대구·경북 관할)이 퇴직자 등 결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되레 정원 감축(“정원 회수”)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결원이 72명이라면서도 그중 43명 만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로 정원 19명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총 48명 정원 감축)을 내놴다. 최영홍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장은 “[감축 인원] 48명은 경북지역에 우체국 하나를 없애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수”했다가 인력이 필요한 우체국들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수한 정원을 언제, 어디에 투입할지 분명한 계획이 없는 데다, 현장에선 당장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게 운영되므로 사실상 인력 감축의 효과를 낸다. 사측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의 경우에 “회수”한 정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경북 지역의 집배원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친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정한 업무강도 기준에 따르면 214명이 ‘여유 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인력이 남아돌기는**

커녕 높은 노동강도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말한다. 사측이 수년째 퇴직자 등 결원이 생긴 자리에 충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겸배’(빠진 동료의 구역을 나눠서 배달하는 일)까지 해 왔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택배 물량도 늘었다.

집배 인력 감축은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뿐 아니라 지방의 우편물 배송 지연 같은 서비스 후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마른 수건 쥐어 짜기

이번 정원 감축 시도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 방향과 연관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목하에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각 지방청별 업무강도를 측정해 결과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수도권을 제외한 7개 지방청에서 ‘여유 인력’이 768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만이 아니라 전남지방우정청(3명), 충청지방우정청(7명)에서도 정원 감축이 추진됐다. 다른 지방청들도 정원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적정 인력” 산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배원 업무강도 시스템은 “살인 업무강도 시스템”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다. 편지 한 통 배송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통에 30.7초로 집배원의 노동을 기계처럼 계량화하고 옥죄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

부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시스템의 폐지와 대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해당 시스템을 근거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몇 차례나 인력 충원 약속을 배신해 왔다. 가령, 2018년에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2020년까지)을 약속했지만, 결국 그것도 뒤집었다. 그리고는 일부 비정규직 위탁택배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때웠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정원 감축에 항의해 집회와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원 감축을 철회하라.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김영익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총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활동가들이 '간첩'이라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비롯한 우파들도 청주 활동가들을 공격했다.

청주 활동가 4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것일까?

9월 10일에 기자가 만난 손종표 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 F-35가 들어오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반대 운동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F-35가 청주공항에 배치된다는 얘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청주공항은 우리가 사는 오창읍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박근혜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F-35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약속한 바와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F-35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입니다.

"이런 전쟁 무기가 들어와 여기[청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1인 시위를 했고, 민중당(현 진보당)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 제안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우리끼리 시작했죠. 1인 시위와 서명 운동 등을 했어요."

정부가 터뜨려 온 '간첩' 사건에는 북한 공작원과 그와 "접선"한 자생적인 좌파 활동가 몇몇이 연루되곤 한다. 그러나 북한 공작원의 존재는 탄압의 빌미일 뿐이다.

좌파 활동가들이 북한 체제를 진보적이라고 여겨 그 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정부 인사들을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토론과 논쟁의 문제이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회합·통신' 문제에 언제나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자신들은 필요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접촉하면서, 좌파 활동가와 평범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나 당국과 '통신·회합'하는 것은 차단하고 처벌해 왔다.



정부는 F-35 배치에 반대하는 평화적 운동을 '간첩단' 활동으로 매도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연계'를 문제 삼지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와 그 운동이다.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활동가 4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고 국내 정세 동향을 탐지·수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2019년 민중당(현 진보당) 총북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었다. 당시 손종표 씨 등은 당내 갈등으로 총북도당 윤리위에 제소돼 있었다.

검찰은 피제소자들이 윤리위 논의 내용을 파악한 게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수집했다는 국내 정세 동향은 대부분 언론 보도, 민주당 지역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국회의원과의 짧은 면담 내용 따위다.

이런 것을 두고 간첩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국가기밀 수집?

손종표 씨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국정원 등의 사찰 대상이었다고 했다. 간첩으로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000년에 국정원은 박응용 씨 등이 속한 새아침노동청년회의 회원에게 접근해 프락치 활동을 하라고 회유하다가 폭로된 바 있다. 박응용 씨의

아들도 표적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 "2008년에 박응용 씨의 큰 아들이 기무사에 끌려 간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간첩이다' 하고 협박했대요."

공안 당국의 계속된 사찰은 이들에게 큰 압박이 됐을 것이다.

수사관들이 몰려가 처음으로 압수 수색을 벌일 당시, 손종표 씨의 집에는 어린 두 자녀들(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있었다.

박응용 씨는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로 오랫동안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해 온 활동가다. 한국타이어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하다가 1995년에 해고됐다.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집단 사망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해 왔다.

손종표 씨는 수감 중인 박응용 씨의 건강을 염려했다. 그가 오래 전부터 타카아수 동맥염을 앓았기 때문이다. 타카아수 동맥염은 구체적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그런데 구속자를 면회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횟수가 제한돼서 일주일에 이틀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밤묘목

청주 활동가들이 벌인 F-35 도입 반대 운동, 북녘 통일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은 평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1인 시위, 서명운동, 모금 같은 온건한 캠페인 방식으로 펼쳐졌다.

손종표 씨는 밤묘목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 산림 복원 항목이 있어요. 마침 지역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묘목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품질 좋은 밤묘목을 키워서 [북한에] 보내 보자고 했어요."

비열하게도 공안 당국은 이런 활동들이 마치 북한의 조종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F-35 도입 반대는 북한의 지령과는 상관없는 평화 운동의 요구다.

F-35 전투기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일각에서는 '게임체인저'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은 자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F-35 도입에 반발해 왔다.

F-35 등의 전략 무기 도입은 중국 등을 자극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불안정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일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복지 향상에 는 인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F-35 전투기를 사오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다.

평화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려면 청주 활동가 4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런데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 온 진보당은 아쉽게도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하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진보당과 청주 활동가 4인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전에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탈당도 했고, 지금은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2019년 민중당 총북도당에서 이 활동가들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그후 그들은당을 나왔다. 특히나 공안

당국이 간첩이라고 호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김재연 대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현명한 일일까?

평소 청주 활동가 4인의 주장이나 활동 방식에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보안법 탄압은 좌파적·반체제적 주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노동운동이 정치화는 것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열의를 보였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성공했는데, 진보당 활동가들이 열성적으로 참가를 조직한 것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국정원·경찰을 앞세워 정부는 국가보안법 칼날을 더 휘두르는 것으로 답했다.

비단 청주 활동가들만이 아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 문제 등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져 왔다. 진보당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한 것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다.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효과를 키우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의를 옹호하려면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해야 한다.

진보당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 앞에서 국방예산 감축과 코로나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군축, 남북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인 진보당은 정부와 우파가 한반도 평화 운동을 '총북'으로 낙인찍고 그 대의를 훼손하려고 청주 '간첩단' 사건을 이용하는 데 마땅히 항의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게 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고 좌파의 정치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좌파라면,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하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9월 30일(목) 오후 8시
발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기관지 <노동자연대> 편집자
※ 전문통역사의 영·한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93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9-202(문자 가능)